

안전장치도, 관리감독도, 계약서도 없었다

반복된 경고 끝에 숨진 28살 하청노동자

금속노조, HL만도 고 김승모 노동자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유가족 입장 발표

지난 22일 HL만도 평택공장 ABS가공 HCUMK 4라인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김승모씨가 MCT 12호기 내부에서 끼임 상태로 발견됐다. 원청 관리자는 그가 기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운전을 지시했다. 병원 이송과 심폐소생술 끝에 그는 결국 숨을 거뒀다. 1998년생, 입사한 지 아홉 달 된 노동자였다.

이 기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같은 모델 148대 전부가 그랬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같은 사고

사고 기계인 HP400은 2005년에 나온 구형 모델이다. 평택공장에는 이 기종이 100여 대

가동 중인데,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의 조사 결과 148대 전부에 인터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락은 기계 가공 중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그고,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다. 신형 기계도 앞문에만 인터락이 있을 뿐 뒷문에는 없다. 김승모씨가 수행하던 정비 업무는 가동을 정지한 뒤 뒷문으로 기기 내부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뒷문 쪽 안전장치는 신형이든 구형이든 애초에 없었다.

같은 기종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미 2016년에 있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가 기계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외주업체 작업자가 가동 버튼을 눌렀다. 다친 노동자는 1년 7개월간 요양했고, 이후 트라우마로 부서를 옮겨야 했다. 설비 교체나 안전장치 보완 요구가 그때도 있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시간 같은 라인의 두 업체

사고 당일 4라인에서는 두 개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했다. 피아로딕스는 11호기 윤활 분배변과 호스를 교체했고, 선진산업은 12호기 절삭유 누유를 정비했다. 선진산업은 점심 전 작업을 마치고 원청에 완료를 통보한 뒤 철수했다. 11호기 작업은 점심시간 이후에도 이어졌고, 마무리 시점에 하청업체 반장이 김

승모씨에게 “12호기 상태를 사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2인1조로 진행돼야 할 작업이었지만, 그는 혼자 12호기 내부로 들어갔다.

12시 40분경, 김승모씨가 12호기 내부에 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원청 관리자가 다른 작업자에게 12호기 시운전을 지시했다. 운전 버튼이 눌린 뒤 충격음과 함께 그가 협착 상태로 발견됐다.

두 업체 간 소통은 없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도 열리지 않았다. 작업지휘자는 사고 당시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정비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시줄은 11호기, 12호기 모두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 뒤 드러난 기록 부실

현장 작업현황판에는 작업허가서 없이 위험성평가서만, 그것도 11호기 것만 게시돼 있었다. 12호기 작업에 대한 서류는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노조가 사측 제출 자료와 현장 일일작업일지를 대조한 결과, 사측이 사고 이후 노조에 제출한 작업허가서는 작업 기간을 7월 17일부터로 적었지만, 같은 성격의 작업이 최소 7월 11일부터 진행돼온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는 위험성평가서도 두 종류를 확보했다. 현장에 게시된 7월 11일자 문서에는 “정비 중 조작 금지 표시”, “주변 근로자 안내 공지” 같은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책임이 담겨 있었지만, 사고 이후 제공된 7월 16일자 문서에는 “보호장갑 착용”처럼 작업자 개인의 역할이나 안전 절차와는 거리가 먼 작업 절차만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사고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청 지시, 계약서는 없었다

피아로딕스는 만도에서 보전업무를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희망퇴직 후 차린, 직원 4명짜리 업체다. 이 업체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원청과 정식 도급계약 없이 원청 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뤄졌고, 대금 결제도 작업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처리됐다.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절차 자체가 없었다.

김승모씨는 하청업체 반장과 공장에 상주하며, 원청 관리자의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원청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 하청업체는 작업 내용을 별도 서비스 목록에 기록한 뒤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었다.

사고 당일도 같은 흐름이었다. 원청 관리자가 그날 아침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26일까지 앞당겨달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계획대로면 7월 28일해야 끝날 일정이 갑자기 이틀 앞당겨졌고, 그 압박 속에서 반장이 김승모씨에게 12호기 사전 확인을 지시했다. 노조는 생산 압박과 외주화, 계약 없는 작업지시가 사고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멈추지 않는 공장

2026년 1분기 기업공시에 따르면 평택공장이동률은 88%다. 제조업 현장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수치로, 공장을 사실상 풀가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현장 작업자는 “그만큼 만도가 생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다. 그런 곳에서 안전은 보이지 않는 게 당

연하다” 고 말했다.

인터락을 해제하고 가동 중인 기계 문을 여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 관행으로 굳어 있었다. 사측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았다. 대신 “설비 정지 후 작업”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로 대응해 왔다. 노조는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한 운영 방식이 안전보다 우선돼 왔다고 보고 있다.



개별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한 노동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락 없는 설비를 장기간 방치한 점, 계약 없이 원청 지시를 받아온 하청 구조, 작업 전 위험요인을 공유하지 않는 작업관리, 서로 다른 작업기록까지 모두 같은 구조 안에서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생산 확대와 외주화가 안전보다 우선되는 현장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도는 2013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년퇴직자가 매달 100여 명씩 나가는 동안 조합원 평균 근속은 29.4년, 평균 연령은 53.2세까지 올라갔다. 단체협약 31조는 자연감

소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우도록, 32조는 외주 전환 시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측은 합의 없이 외주화를 늘려왔다.

사과 아닌 책임 회피

사측은 119 구급차로 고인을 이송할 때까지도 노동조합에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노조는 조합 간부가 우연히 구급차를 목격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고,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직후 MCT 설비 내부 유지·보수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은 11·12호기 두 대만 작업을 멈췄다.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이후 4라인 MCT 설비 15대 전체로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됐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사고 다음 날인 23일 평택공장 현장에 게시한 사과문이 작업자 개인 과실로 사고원인을 돌리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과문조차 유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사과문을 붙인 다음 날, 사측은 사고가 난 기계를 곧바로 재가동하려 했다. 노조가 제지하고 나서야 재가동은 멈췄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과 후 생산을 정상화하려 한 것이다.

사측은 또한 한 경제지를 통해 “작업자가 다른 경로로 설비 내부에 진입해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발언을 전달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12호기는 애초에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구형 모델이며, 신형 모델이라 해도 김승모씨가 진입한 뒷문에는 인터록이 없다.

“저런 환경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사고 났을 것”

유가족은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노동조합에 대응을 위임했다. 29일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어머니는 “천재지변이 아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사측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을 지적했다.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고인의 아버지는 “만도라는 큰 회사가 어찌 저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라는 거냐, 어떤 누구도 저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온전한 진상규명까지 대응 이어갈 것”

금속노조는 29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조사 결과와 유가족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유가족은 이날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는 배상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수사당국이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 조성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사외하청 규모·작업절차·방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노동조합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안전시스템 강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